

# 3대 특검 후보... 민주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조국혁신당 '한동수·심재철·이명현' '김건희 특검' 민중기·심재철, '채상병 특검' 이윤제·이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각각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후보, 한동수·심재철·이명현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추천한 후보자는 내란특검의 경우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조국혁신당), 김건희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조국혁신당), 채해병 특검은 이윤제 교수(민주당)·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조국혁신당)이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전날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양당의 후보 추천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각 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천자 3인은 전 현직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조국혁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사건개편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 파견 검사 규모는 6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40명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 채해병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견 검사 규모는 20명이다. /뉴시스

김건희와 임태근·김건희 특검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힘 재선들 "새 원내대표 선출 전에 혁신 의총 소집해야"

재선 의원 16명 지난 10일 이후 두 번째 입장문...16명 동창 국민연합 청년당직자들, 8월말 전대·김용태 임기 연장 요구

국민연합 재선의원들이 12일 원내지도부에 당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합 재선의원 16명은 이날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의 두 번째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내 재선의원 30명 중 강민국·권영진·김미애·김승수·김예지·김형동·박수영·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조정훈·최형두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어제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통보)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16일 오전이라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지난 10일 재선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 방안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정상적 지도 체제로 당을 혁신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새 지도부 구성 때까지 연기하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방법론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혁신을 논의할 중요한 의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차기 지도부도 넘길 일이 있고, 현 지도부에서 정리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 의총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이를 늦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합은 지난 11일 오후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내 지도부는 개최 40분 전 의원들에게 문자로 의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퇴임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의총 취소 배경과 관련해 "(9일) 의총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대다수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달랐다. (당내 여론) 겁이 나서 의총을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합 청년당직자들도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광복 80년, 식민지 역사의 기억 계승 방안을 주제로 한 광주시의회 제130차 정책토론회가 1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 "광주에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하자" 시의회 토론회 "피해자 경험과 기억,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광주에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기 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복 80년, 식민지 역사의 기억 계승 방안'을 주제로 제130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해경 일제전쟁유적 네트워크 대표는 "국내 일제 전쟁유적 '현행 제도와 정부 주도의 물적 개발 방식으로는 유적의 본래 역사와 기억이 소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일제 전쟁유적을 반전 평화교육의 장이자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공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견 검사 규모는 20명이다. /뉴시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은 "2025년 1월 기준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640명에 불과하고, 지난해 904명에서 1년 사이 264명이 사망하는 등 생존자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며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다큐멘터리 '금주의 유산'을 제작한 광주MBC 홍진선 PD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를 이끌었던 고(故) 이금주 회장의 대일 투쟁을 다큐멘터리로 소개하고,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을 주관한 박수기 의원은 "광주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전후 청산을 위한 대일 소송 투쟁을 선도해 왔는데, 피해자의 울분과 한이 담긴 대일 소송 기록을 온전히 보존할 장소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 與 "대선 중 '李 암살' 계획 드러나... 엄정한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가 '이재명(당시 대선)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미국 사람에게 총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그 어떠한 폭력적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극우 유튜브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 보도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테러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라

며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브의 이재명 후보 암살계획을 앞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위협 사실을 보고받은 여부와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며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음모는 국민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다.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 주 시

이 글의 광고는 한국인본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